

가스안전기기 가정내 1백%보급 가능한가?



◇전 가스사용기구에 가스안전기기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설치 가격의 현실화와 업계의 적극적인 보급 의지가 변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가스사용기구에 대한 가스안전기기의 완전 보급은 가능할 것인가.

당초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일반 업소는 2003년까지 가정은 2005년

까지 휴즈콕크는 물론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의 안전기기를 보급한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현재 실행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접하는 일반 가스사용기구에서는 이에 대한 인지도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부터 진행된 안전기기보급계획이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스안전기기의 보급계획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7년도 국내 가스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4백75건의 가스사고중 주택, 요식업소 등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67%를 차지했음은 물론, 사고원인중 제품불량 및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는 전체사고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난 이후이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정 및 요식업소 등 사용시설에서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위해 가

스안전기기 보급을 활성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하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안전기기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안전기기보급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이같은 정부계획은 일반 가정 및 요식업소에 적극적인 홍보가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휴즈콕크보급은 1천4백70여 대상가구 중 약 1백여만개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돼 보급율이 약8%대에 불과하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또한 보급율이 3~4%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 가스관련 업체 및 전문가들의 공통견해이다.

가스안전기기를 제조하는 T사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국내 가스사용가구에 대한 안전기기 보급을 추진하는데 있어 산자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주도의 보급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안전기기보급이 거의 1백% 되어있는 상태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보급을 위한 계획 및 실행여건에 큰 차이가 있다"며 관주도의 보급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실 일본의 경우는 86년부터 LP가스사용가구

에 대해 민관공동으로 FAIL SAFE기구 (LP가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기구의 보급활동을 통칭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연소를 비롯한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기구)가 부착된 안전기구 보급활동을 전개한 결과 가스밸브의 오개방, 고무관의 이탈, 연소기구의 점화실수 등 소비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급격히 감소했음은 물론, 가스안전기기보급이 전에 비해 보급이후의 가스사고가 약 1/5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시가스의 경우도 일본내 도시가스회사(약 2백50개)들이 공동개발한 MY-SAFE(동경가스(주)를 주축으로 도시가스회사가 공동개발한 마이콤형자동가스차단장치부착 가스미터의 약칭)를 지난 82년에 2천대를 처음 설치한 이후 지난 96년 말에 전체 사용가구의 98%, 현재 거의 1백%가 보급됐으며 초창기에는 임대 계약제에 의해 본격적인 설치를 시작해 1백%보급이라는 결실을 맺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를 거둔 일본의 경우도 가스안전기기보급계획을 결정한 후 완전보급에 이르기까지 10여년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보급의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현재까지의 보급실적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가정에 대한 홍보 및 지자체의 협력관계가 적절히 유지된다면 의외로 완전보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가스안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결여돼 있고 가스안전기구의 경우 설치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추가경비지출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급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각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일반 가스사용가구에서 휴즈콕크 및

가스누출경보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각 지역본부 및 지사별로 학생, 주부, 식품접객업소, 민방위·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약 1천8백여 차례에 걸친 순회계몽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 및 내무부의 협조를 통해 시·군·구의 반회보에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함은 물론, 여성·사회단체와 협조해 각종 유인물에 기사 게재,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순회계몽운동을 추진하고 행정관청 및 한국음식업중앙회와 연계해 식품접객업소에 재한 집중 계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같이 각 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의 협조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그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일반 가정 및 요식업소에 보급되고 있는 휴즈콕크 및 가스누출경보기의 보급가격이 설치업자에 따라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반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가격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 일이다.

실질적으로 LP가스시설의 경우는 보통 제품가격에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정 가격산정이 다소 어려워지는 몰라도 현재 5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있는 가스안전기기일제 보급기간에는 휴즈콕크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하고 개당 8천원, 가스누출경보기는 개당 1만2천원,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는 7만원에 보급할 계획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정해 이에 근접한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결국, 전 가스사용가구에 안전기구를 보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가정내 홍보와 실제 안전기구를 유통하는 설치업자간에 적정 가격산정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도래할 경우 기기보급을 위한 각종 방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